아태연구 제14권 제1호
2007년 5월 30일 pp.1~17

21세기 한국 민주주의와 중도 정치이념

- 민주당의 생활정치 분석을 중심으로 -

이 구
동서협력재단 연구위원

< 목 차 >

Ⅰ. 서론
Ⅱ. 이념 사회의 유형과 권리
Ⅲ. 한국 사회의 이념적 갈등과 양극화
Ⅳ. 중도정당(Center Party)과 생활정치이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Key words(중심용어): 탈산업화(post-industrialization), 양극화(polarization), 중도정치(center party ideology), 경제성장(economic growth), 인권(human rights)

국문요약

본 논문에서는 현재 한국사회의 시대정신으로 거론되는 중도정치가 대두된 배경인 양극화 문제를 정치·경제 분야에서 살펴보고, 중도정당으로서 민주당이 표방하고 있는 생활정치의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가 무엇인가를 분석하여, 21세기 한국사회의 통합과 실질적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사회 변화과정에서 드러난 3가지의 특징을 압축성, 중첩성, 그리고 시차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정당정치의 왜곡, 현대사회 문명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회적 배제현상, 그리고 경제적 약자 층이 확대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 없이는 21세기 탈산업화 시대의 선진사회 건설은 요원하며 새로운 사회 모델 구축에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인 인권보호라는 것을 강조한다.

I.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변화 속에서 야기 된 갈등의 주된 원인이 이념적 양극화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중도정당(Center Party)의 이념 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조건들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사회 통합과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www.kci.go.kr

있다. 여기서 통합되고 안정된 사회란 첫째, 정체적 또는 급진적이지 않고 현실적이고 평화적이며, 둘째, 법체계와 적용에 정당성과 공평성이 시민들에 **의해 확인되고, 셋째, 시민의 정치적·경제적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이다.[1] 이러한 안정된 선진사회는 중도정치를 표방하는 민주당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이며, 이를 위해 생활정치 개념이 도입되었다. 따라서 생활정치란 '극단적 양분에 의한 이념정치를 지양하고, 국민의 삶과 직접 관련된** 정부의 공공정책(환경, 부동산, 조세, 노동, 복지, 민영화 등) 결정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선거, 의회 채널, 인터넷언론, 시민단체를 통한)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실질적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치'라고 규정될 수 있다.

전후 서유럽 국가들과 미국이 경험한 사회변화와는 달리, 한국은 시간, 내용, 형식면에서 세 가지 특별한 변화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첫째, 서구 사회는 한세대(약 30년)에 걸쳐 정치체제 안정과 경제 발전을 점진적으로 이룩하였고, 다원주의 이념이 이러한 변화의 길잡이 역할을 했다. 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다원화된 한국 사회는 권위주의 시절 억압된 욕구가 한순간 다양하게 분출되면서 사회 내 조직관계 또는 사회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 빈번한 갈등이 발생하였다. 산업화 시대에 자본 세력과 노동 세력 간의 이익 충돌에 의한 계급정치가 태동한 가운데,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가 도래할 때까지 경제 발전과 민주화에 의한 사회 안정을 단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경험을 하였다. 이는 한국사회 변화의 압축성을 의미한다. 둘째, 탈냉전 이후에도 여전히 남북분단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국가 산업구조 정책변화, 외환위기에 의한 경제 침체와 대량 실업 사태는 한국사회의 탈산업사회(post-industrial society) 계기로 작용했다. 산업화 시대에 필요한 사회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기도 전에 탈산업시대의 도래는 구성원의 가치(value)와 사회제도의 중첩으로 인한 혼란을 야기 시켰다. 한국사회 변화에 나타난 중첩성은 외형상 역동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내용상으로 사회갈등(이념, 가치, 세대)에 대한 대응책이 미흡했을 때, 불공평 문제와 불평등 관계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셋째, 내용과 속도 측면에서 한국사회 변화와 이에 반응하는 정치권(정부 또는 정당)의 대책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했다. 정치권은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형성해야 하는 책임을 간과함으로써, 사회안정과 통합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 또한 탈산업사회에 대두된 실업, 인권, 환경,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된 세력은 공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로 인해 정당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정치권의 책임(responsibility)회피, 관용(tolerance)의 부재, 그리고 불신(distrust)의 심화는 민주주의의 위협요소로 간주된다.[2] 따라서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중도정치와 중도정당(Center Party)의 역할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은 21세기형 조화로운 민주사회 건설에서 구성원들이 원하는바가 무엇인지를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Steven Lukes의 6가지 사회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사회유형과 정치적, 경제적 권리간의 상관관계와 현재 한국 이념문제의 사회적 배경을 알아보고자 한다. 제 3장에서는 한국사회의 다원화 모습 속에서 사회 갈등요소인 이념대립과 경제의 양극화 문제에 관해 살펴본다. 제 4장에서는 중도정당의 통치이념으로서 사민주의의 독일사회당 적용 사례와 한국에서 사민주의의 지속적인 적용의 한계, 그리고 민

1) John Rawls, "The Law of Peoples," in Stenphen Shute and Susan Hurley, eds. *On Human Rights: The Oxford Amnesty Lectures* (New York: Basic Books, 1993), pp. 62-75.

2) Frederick M Barnard, *Democratic Legitimacy: Plural Values and Political Power* (London: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01), p. 6.

www.kci.go.kr

주당의 생활정치가 한국의 양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II. 이념 사회의 유형과 권리

서구 선진산업사회에서 성장과 분배의 문제, 실업문제, 통치와 책임의 문제, 정책의 현실성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서구 정당들은 정치체제의 효율성증진에만 몰두한 나머지, 그들의 정강정책에 명시된 원칙들-자유, 사회정의, 신뢰-을 공공정책으로 이행하는데 있어 본질적 가치인 '시민의 권리보호'를 소홀히 취급했다. 서구 정치가들은 국제사회 속에서 제 3세계 국가들의 인권문제만을 심각하게 다룬 반면, 정작 그들의 사회변화 과정(정치, 경제, 사회분야)에서 야기된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인권문제로 인식하지 못했다.[3] 이러한 서구적 경험은 선진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국가들에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21세기 선진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처럼 자유 민주체제에서 형식적 정치 평등과 자본주의 제도에서의 확연한 권력의 불평등 승계 간의 본질적 긴장이 상존하는 사회에서는 개인과 집단의 권리가 무시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만약 인권 원칙 수용이 정부 기구 또는 사회 조직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도의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면, 어떤 식의 사고(또는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인권 보호원칙을 부정하거나 수용하는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5가지 사회형태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 사회분화의 배경과 양극화문제 속에서 권리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1. 반인권 사회형태

공리 사회(Utilitaria)

공리 사회에서는 집단적 목표에 대한 강한 공공의식으로 무장한 공리주의자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들 사회의 유일한 목적은 모든 구성원들의 총체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공리사회의 최고의 가치는 효용 또는 행복이다. 따라서 효용을 최우선시하는 가운데 국가(또는 정부) 정책 결정과정에서 고려되는 원칙은 '최대다수의 대한 최대행복'이다. 공리주의자들은 효용의 개념에 대해서, 고통의 부재 속에서 행복을 위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 규정한다.[4] 또한 이들에게 최대 행복은 최소화된 불행을 의미한다. 공리사회에 대해 여러 견해가 난무하는 가운데 모든 공리주의자들이 공감하는 한 가지 원칙은 효용과 관련된 모든 것을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Lukes는 효용에 대한 계산이 국가적 고정관념이 될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5] 공리주의

3) 권리는 제 1세대의 시민·정치적 권리, 제 2세대의 경제·사회적 권리, 제 3세대의 단결권으로 구분된다. 1세대 권리는 도덕적 권리로써, 공적인 권위가 침해 할 수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2세대는 식량, 의복, 주거 그리고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 사회적 권리를 강조하며, 3세대 권리는 평화, 깨끗한 환경에 관한 권리를 의미한다.

4) Geraint William (ed), *John Stuart Mill, Utilitarianism: On liberty, 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 Remarks on Bentham's Philosophy* (London: Everyman, 1993), p. 7.

www.kci.go.kr

사회에서는 전문가 집단(기술관료, 행정관료, 판사 등)이 가장 영향력이 크고 존경받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컴퓨터를 통한 국가정보를 손쉽게 접근 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리주의 사회에는 두 개의 정당이 경쟁을 한다. 우선, 행동당(The Act Party)은 사회 구성원에게 가능한 모든 경우에 있어 효용에 대한 계산기 사용(정책 결정에 참여)을 조장하는 반면, 규범당(The Rule Party)은 일상생활에서 보통 사람들의 계산기 사용에 반대 한다. 행동당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수의 참여는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신보수주의(엘리트정당) 또는 막시즘(좌파정당) 논리와 대조를 이룬다. 이와 대조적으로 엘리트(규범) 정당은 월등한 계산능력을 구비한 전문가들이 고안하고 해석한 법칙과 관례에 따라 살아가면 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공리 사회에서 개인의 삶과 조직의 운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두를 위한 최대한의 혜택(공공이익)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개인이나 약한 조직에게 어떤 희생이 요구될 것인가에 대해 아무도 확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리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인내와 더불어 희생에 대한 준비(공익정신)가 되어 있어야 한다.

공동체 사회(Communitaria)

공동체 사회 구성원들은 실용주의자들보다 친절하지만 그들 또한 높은 공공의식과 집단적 목표를 소유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공동체 사회는 강한 유대감으로 유지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유대감의 바탕에는 서로 인정하고 그들 스스로를 동일시하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공동체주의자들의 국가적 고정관념은 일체성(identity)이라고 할 수 있다.[6] 공동체사회 형성의 역사적 배경은 땅, 뿌리, 농촌과 같은 개념과 연계되어 있으며, 구성원들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특징으로 한다. 공동체주의자들은 공리주의자들의 계산적인 삶을 경멸하는 반면, 자신들이 속한 전통과 관습의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상호이해를 공유하는 삶을 영유하고자 한다.

공동체주의자들은 그들의 현실적, 구체적, 지역적인 삶의 양식과 비교해 볼 때, 인권개념이 너무 추상적이라 규정짓고 인권 수용을 거부한다. 그들은 자유와 속박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그리고 무한한 변화를 허용하기 때문에 어떤 추상적인 규칙 또는 원칙에 의해서 규정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7] 따라서 공동체주의자들의 추상적인 완벽성이 인권원칙 수용에 있어 현실적 결함이라는 지적은 설득력을 갖는다.

신공동체 사회(New Communitaria)

이 사회의 특징으로 하부 공동체들이 발달하고, 이들 간에 긴밀한 연결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구성원은 각자의 독특한 삶의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개별적인 가치를 인정한다. 신공동체주의자들은 공평성(fairness)의 원칙에 따른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수

5) Steven Lukes, "Five Fables about Human Rights," in Stephen Shute and Susan Hurley (eds), *On Human Rights: Oxford Amnesty Lectures* (New York: Basic Book, 1994), p. 21.

6) David Rasmussen (ed), *Universalism vs Communitarianism: Contemporary Debates in Ethics* (New York: MIT Press, 1995), pp. 1-10.

7) John Plamenatz, *Man and Society: From Montesquieu to the Early Socialists* (London: Longman, 1993), pp. 116-122.

www.kci.go.kr

용하고, 특히 국가제도에 있어 각 하부공동체(조직/단체)의 역할을 인정하는 정치를 추구한다. 이러한 정치과정에서 긍정적 차별이 이용되는데, 그 목적은 소수 원주민보호나 불리한 입장의 사람들을 돕기 위함이다. 이 사회에서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동등한 가치 적용의 당위성을 교육하며,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하부공동체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생활한다. 하지만 어떠한 우선적 또는 지배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첫 번째는 가입과 배재의 문제로서, 전체사회구조에서 어느 하부조직을 가입시키고 배재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 방법은 무엇인가? 이다.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은 다인종 국가에서 이민 2세에 대한 교육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국공립학교 프로그램에 인디언 언어를 포함시킬 것인가 또는 배재할 것인가의 문제는 자칫 소수자의 희생을 낳을 수 있는 반인권 요소이다.

두 번째는 상대주의 문제로서, 신공동체 사회는 승인된 모든 하부공동체의 신념과 행위를 동등하게 취급할 것을 의무로 규정짓고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하부공동체들은 비교할 수 없는 신념과 관습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특정 기독교 종파 교인들의 집총거부는 병역법 위반에 의한 인신 구속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무산사회(Proletaria)

무산사회에서 구성원은 아주 다양하고 충만한 삶을 추구한다. 그들은 엄청난 양의 기술을 개발하며, 아무도 주어진 직업, 역할, 활동영역에 맞추기 위해서 생활하지 않는다. 이 사회에서는 노동의 기능이 퇴색되어 있다. 즉,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일 또는 그들이 이행하는 기능들과 더 이상 동일시되지 않는다. Engels가 예언 했듯이 사람에 대한 지배는 사물에 대한 관리와 생산과정에 대한 지휘에 의해 대체되었다. 사회 내 구성원들은 서로 동일시된다. 그 이유는 공동체 사회처럼 하부공동체에 함께 소속되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이다. 또한 남녀 관계에서의 완전 평등과 상호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무산사회에서는 유일하고 압도적인 고정관념이나 삶의 방식이 없다. 따라서 개인이나 개별적인 가족의 이해와 다른 개인들의 이해사이에는 어떠한 대립이나 모순이 없다고 한다. 이러한 무산사회에서 삶의 유일한 문제는 문제점이 없다는 점이다. 사회가 지나치게 완벽성을 강조한 나머지 비현실적이고 탈지구적인 사회형태를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무산사회에서 인권 거부논리는 Marx의 주장에서 그 기원을 찾아 볼 수 있다. Marx는 인권에 대한 논의는 이데올로기적인 넌센스(nonsense)이며 구시대적인 발생이라 묘사 했다.[8] 즉, 인권은 계급투쟁의 열기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은 승리하는 것이지 적대계급에 대한 동정이 아니라고 한다. 실제로 무산사회의 인권논리는 북한 정권이 체제에 반대하는 정치범이나 체제를 이탈하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 대처하는 논리와 수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상의 사회 유형에서 인권을 보호한다는 의미는 실용사회에서의 희생, 공동체사회에서의 힘겨운 역할, 그리고 부상, 쇠퇴, 편견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사회에서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이 처한 경제, 법, 정치, 문화적 조건들에 대한 배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권보호는 개인을 위한 개별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다양한 활동과 관계를 보호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

8) 김계수, 『歐美政治思想史』 서울: 일호각, 1986, pp. 243-249.

www.kci.go.kr

해석이 필요하다.

2. 인권 사회형태

자유사회(Libertaria)

각종 권리가 풍만한 사회라고 간주되는 자유사회에서 개인의 삶은 철저히 시장원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자유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사고 팔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국가적 고정관념은 '비용-수익분석'이다. 모든 권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자신에 대한 소유권과 노동이 결합된 것으로부터 파생된 재산에 대한 권리이다.[9] 또한 자유주의자들은 그들이 정당하게 소유한 것에 대한 자유로운 이동을 결정하는 권리에 대해 강조한다. 예를 들면, 그들의 권리가 사교육이나 부의 상속, 증여, 양도, 교환 등을 통하여 가족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를 원한다. 정부는 자유체제의 근간인 자유왕래, 경제기반, 군대와 경찰, 그리고 자유계약을 강화하기 위한 사법제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세를 부과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인위적이거나 의무적인 재분배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시민의 무한한 권리에 위반되기 때문에 금지된다. 이것은 공적 부조와 같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자유사회 내 계층, 재능과 노력의 차이에 근거한 불평등은 크게 심화된다.

모든 국가 기반 시설이나 제도(예, 교육, 의료, 운송, 가스, 전기, 우정, 물, 발전, 통신)에 있어 국가소유와 운영은 인정되지 않으며, 사유화 공공정책이 선호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 동정심과 자선의 방안을 갖고는 있지만, 자유주의자들은 이들의 어려운 형편을 불공평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운 상황이 어느 누구의 권리에 대한 침해로부터 야기된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개인이나 조직에 대한 적극적인 차별이 금지된다는 의미에서 동등한 기회가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삶의 경주(race)에 참여 할 수 있으나 실패자는 경주에서 퇴출당한다. 이는 사회 특권층이 사회적 배경에서 연유된 상당한 이점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처음부터 직업이나 보상에 있어서 불평등이 존재하는 자유주의 이념적 모순의 결과이다.[10] 또한 자유주의 사고의 문제점은 자유주의자들의 이득의 일부가 다른 사람의 비용(노력)에 의한 것과 자유주의 삶의 구조가 부도덕(injustice)의 구조라는 생각에 둔감하다는 것이다.

평등사회(Egalitaria)

평등사회에서는 시민들이 동등한 가치를 가진 인격체로서 간주되기 때문에 계급이나 계층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사람의 복지나 자유는 다른 이의 것만큼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겨지며, 기본적 자유, 법치주의, 인내(tolerance), 기회의 균등은 모두 법적으로 보장된다. 동등한 권리에 대해 구성원 모두가 다른 시민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가치는 실현된다. 이것은 평등 또는 정의사회 이행의 전제 조건이다.[11] 여기서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평등사회를 실현 할 것인지에 대해 다음 두 가지 입장차이- i) 이익의 균등분배 ii) 구할 수 있는 최적의 조합에 의한 균등분배- 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12] 실현 방법상의 차이에도 불구

9) Jeremy Waldon, *The Right to Private Property* (Oxford: Clarendon Press, 1990), pp. 177-178.
10) Steven Lukes, p. 32.
11) 고대 그리스에서 '평등'(equality)이란 단어는 '정의'(justice)의 뜻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았다.

www.kci.go.kr

하고,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입장은 시민 생활부분에서 최악의 상태를 개선시키는데 우선순위를 두면서 모든 시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평등 사회를 위한 경제적, 정치적 기본구조가 창조된다고 평등주의자들은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평등주의자들은 개혁적 조세와 확대된 복지 정책이 모든 시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평등주의 문화 내에는 정책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비자발적 난제(involuntary disadvantage)를 제거하려는 힘이 존재한다.[13] 이러한 힘은 종교, 계급, 인종, 성별 등에서 연유된 불공평 또는 비합법적 불평등에 대한 시민의 인식에 의해서 증폭된다. 평등주의자들은 그들 사회의 원형을 유지하기 위해 비자발적 난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만들고 해결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과연 평등사회는 가능한 것일까? 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평등사회의 성취가능성과 지속성에 대한 입장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성취성과 지속성에 대한 회의가 대두되는 배경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평등사회가 신기루와 같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경제 분야에서 발견되는 자유주의적 제약 때문이다. 평등주의자들은 최대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 극도로 관심이 높다. 하지만 평등사회 건설을 위한 과정에서 그들은 평등과 효율성이라는 가치가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의해 행동한다. 따라서 오늘날의 평등주의자들은 자유 시장경제 원리와 원칙에 대해 학습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그들은 시장(재계)의 영향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에서 독점과 과점 행위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없다면, 그들이 추구하는 평등사회는 유지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결국, 시장경제는 탐욕, 소비주의, 상업주의, 기회주의, 정치적 수동성, 무관심, 익명성, 사회적 배제나 소외된 자들의 세상을 조장할 것이다. 또한 평등주의 사회는 자원배분에 관한 국가 또는 정부의 역할 수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자원이나 원칙 적용에 있어서 공평성이 지켜지지 못할 경우, 정부는 시민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둘째, 평등주의 사회 유지에 대한 회의적 입장의 등장 배경으로 인종, 언어, 종교, 가치 등에 근거한 문화 다원주의가 주목을 받고 있다.[14] 왜냐하면 이러한 문화적 요인들은 공동체 내부의 동질성 확인의 기준이거나 신공동체 사회에서 외부사람 또는 문화를 포용 할 것인가 또는 배제할 것인가의 결정 기준이 되는 공동체적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등주의자들은 공적 또는 정치이슈에 있어 모든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관점과 환경에 근거하여 보편적 개념을 형성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개념에 의하여 모든 사람의 삶의 가치, 자유, 복지가 자신의 것만큼이나 동등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자연스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실제로 유고슬라비아 연방 내 세르비아인과 크로아티아간의 문화적 배제로 인해 발생된 문제는 평등주의자들의 주장과 불일치한다. 누구를 참여시키고 배제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은 상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현대 국가체제에서 집단적 그리고 공동체적 정체성은 항상 타인(other)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등주의자들의 믿음에 대한 의문은 해결되기 어려울 수 있다. 오히려 그들의 평등논리는 오늘날 민주체제의 '경제적 불평등'과 '민족주의'가 심화되는 상황 하에서 반평등정치(anti-egalitarian politics)를 뒷받침하는 데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12) Gregory Vlastos, "Justice and Equality," in Jeremy Waldron (ed), *Theories of Righ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p. 65.

13) Steven Lukes, p. 34.

14) Anthony Giddens, *The Third Way: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 (Cambridge: Polity Press, 2004), p. 133.

www.kci.go.kr

위에서 살펴본 사회유형을 참고할 때, 현재 한국사회는 전통적인 농경문화의 영향에 의한 공동체 사회 이념, 18세기 실학에 의한 실용주의, 일제식민시대 민족주의와 병행된 자유주의, 해방 전후의 무산사회이념에 대한 일시적 경험, 경제개발과 교류확대에 의한 신공동체 사회,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부의 양극화에 의한 평등사회 이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사전개에 따른 시대별 특징과 내용적으로 중첩된 성향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과 양극화 문제의 원인이 복합적인 이념요소에 의한 것임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사회이념이 구성원의 권리에 대한 인식변화에 환경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III. 한국 사회의 이념적 갈등과 양극화

한국은 21세기 선진산업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정치참여 문화의 확대, 탈산업구조에 의한 실업과 고용불안정 심화, 양극화에 의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즉, 한국사회는 다양한 이해의 폭발적 양상과 이해상충으로 인해 사회제도 및 사회조직 전반에 걸쳐 갈등과 혼란이 확산되고 있는 형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정 이슈나 의제에 관해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이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들의 갈등이 공익성보다는 권력쟁취를 위한 당파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좌우의 대립갈등은 사회 불안정과 불신을 낳는 요인이었다. 그 결과 IMF외환위기 이후 민생경제 불안정, 타협과 양보를 거부하는 노사관계, 공공정책 실패에 의한 정부불신, 부정부패로 인한 정치 불신, 북핵 개발과 작통권 반환 찬반문제로 인한 국론분열과 같은 사회 문제로 국민적 고통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정당의 역할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당은 사회내부 또는 사회와 정부 간의 긴장관계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당정치가 한국 정치체제에서도 오랫동안 중요한 부분을 담당 해왔다. 하지만 참여시대에 한국 정당들은 헌법기관과 정치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비하,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존중 반영하지 못하는 의회정치 한계, 시민사회와 정치권 간의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과 같은 문제로 인해 불신을 받고 있다.[15] 이는 한국 정당들이 제도나 통치이념에 대한 충분한 연구 없이 민주정권의 창출과 정통성확보에만 몰두한 나머지, 세계화와 탈산업화 패러다임의 시대정신을 읽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대책을 누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21세기 한국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지난 10년간 지속된 보수와 진보세력 간의 이념갈등과 그로인한 파괴적 결과의 양상을 정치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보수-진보 이념갈등

1987년 민주화이후 보수와 진보는 다양한 차원에서 변화하는 가운데,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이 두 진영 간의 파괴적인 대립이다. 이러한 갈등은 그 강도와 범위에 있어 지역 갈등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16] 해방당시 건국을

15) 백승현, “국민 대표의 원리와 민주주의: 이론과 평가,” 『시민정치학회보』 2006 제 7권, p. 66.
16) 박효종, “한국 보·혁갈등에 관한 일 고찰: ‘포스트민주화 패러다임’의 부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새로운 갈등구조와 국민통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체 학술세미나, p. 16.

www.kci.go.kr

매개로 하여 격렬했던 좌우 갈등의 배경이 냉전시작과 동시에 외부의 영향에 의한 외생적 갈등인 반면, 탈냉전 상황인 오늘날 보수-진보 갈등은 국가공동체 발전 추구라는 목적을 가진 자생적인 갈등의 성격을 갖고 있다. 문제는 양진영이 추구하는 논리상의 대의명분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권력 장악을 위한 갈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민주사회에서 그것이 지니는 가치가 크거나 의미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보수-진보 대결정치가 국민에게 생활의 실질적 향상이라는 보상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보수와 진보 모두는 '보존과 사회변화'라는 공통의 어젠다를 갖고 있지만, '보존'과 '사회변화'에 임하는 방법과 기준이 다르다는 점에서 그들만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들이 지향하는 목표나 세계관은 또 다른 차이를 낳는 근거이다.

한국 보수주의에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한국 보수가 극우 반공주의적·반북주의적·권위주의적 정체성을 일면 담지하면서 자유주의를 억압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유주의이념의 원칙들을 상실하였다는 입장이다.[17] 다음으로, 한국 보수주의는 기획일체를 맹목적으로 거부하고 경직된 현상유지만을 고집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개혁적 성향의 보수주의라는 입장이다.[18] 이러한 입장들과는 별도로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보수주의자들은 사회변화의 기준으로 '경쟁'과 '재산'(property)이라는 자유주의적 가치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듯하지만, 민주주의 공고화시대에 여전히 권위주의적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자유주의 내부화와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 보수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한국진보주의는 과거청산을 통한 현상타파와 급진적 사회변화라는 미래형 목표와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진보주의자들은 개혁에 대한 집념이 매우 강하며, 이러한 모습은 그들을 영원한 개혁주의자로 특징지을 수 있는 요소이다. 반면, 이들은 미래의 목표와 가치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현실 문제를 다루는데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무엇보다도 진보세력의 다원화 부재와 이념적 경직성은 공공정책을 통하여 지지자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이다. 이는 2004년 17대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는 요인과 관련이 깊다. 또한 참여정부의 경우, 집권 초기 과거청산에 너무 몰두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성장위주의 권위주의 발전 모델에 반대를 표명하였지만,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구체적인 대안모델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상에서와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보수와 진보는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뒤로 하고 공존보다는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들의 적대적 대립관계로 인한 국론분열, 시민사회의 정체, 민주주의 공고화에 대한 불안, 정치체제에 불신 등이 한국사회의 발전적 변화를 가로 막는 장애요인이라는 점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만약 보수와 진보에 의한 극단적인 이념적 양분체제가 이념적 경직성과 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해 지속된다면, 한국인의 삶의 질 향상과 민주화 시대의 새로운 정치체제 형성이라는 시대적 소명은 요원해 질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실직적인 대안 세력으로서 중도정당(Center Party)의 역할이 요구되는 것은 화해와 공조라는 시대정신에 따르는 것이다.

17) 조희연, "한국의 이념 갈등과 '진보의 혁신', '보수의 혁신' 『한국사회의 새로운 갈등구조와 국민통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체 학술세미나, p. 65.

18) 박효종, ibid, p. 19.

www.kci.go.kr

2.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한국 경제는 1997년을 계기로 신자유주의 세계 경제 체제에 편입되면서 탈산업화와 경제적 양극화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즉,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와 비IT산업의 소외, 고도의 지식정보를 지닌 근로자 우대와 달리 일반 근로자의 역할 감소, 신자유주의 경쟁체제 하에서 도입된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한국 경제의 양극화를 가져온 주요 요인이었다.[19] 이후 10년 동안 한국 사회는 비정규직에 의한 고용불안,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중산층의 붕괴, 청년실업 증가, 외국인 투자 감소, 집값 폭등, 세금증가 등의 경제문제로 인해 정체상태에 처해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현실은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자유주의 원칙에 근거한 신자유주의의 경제체제가 사회정의에 대한 간과와 다수 대중의 경제적 권리에 대해 무관심이라는 문제점이 노출된 좋은 사례일 것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체제가 그 이상적 목표와는 달리 불평등(inequeality)과 불공평(unfairness)을 낳는 게임의 규칙과 가치를 강요한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를 알게 된다.

한국처럼 신자유주의체제의 영향력을 벗어 날 수없는 상황 하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실제로 국민의 정부는 복지 확대를 통하여 불평등과 불공평문제 해결시도 하였다. 하지만 복지 확대와 더불어 성장의 안정성을 위해 절대 필요한 사회 통합을 경시하였다. 참여정부는 권력분화에 초점을 맞추어 비조직화된 그룹이나 사회적 소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 기존 세력과의 이익 조정과 중재에 적극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다수대중의 경제권을 확대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결과는 서민경제 파탄이라는 성적표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참여정부는 사회보장확대, 안정적 연금, 높은 수준의 건강보험 등의 시행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평성을 유지하는데 있어 필요한 비용이 '투자와 성장'에 의해 산출된다는 점을 간과했다. 재계의 영향력을 무시하는 가운데 투자 없는 성장을 기대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의 배경에는 세계화 시대에 기업과 자본을 여전히 투쟁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거대노조와 정부 내 진보세력의 인식이 작용했다고 본다.

둘째, 참여정부는 탈산업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실업, 환경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특히, 청년 실업은 젊은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근로를 통해 획득한 소득으로 삶의 목적을 추구하고 재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한다는 의미에서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건전하고 충만한 사회형성에 그들이 기여할 수 없다면, 비록 외형상 역동적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은 정체된 사회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셋째, 한국사회에 산재된 불균형간의 균형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조직정비, 관료의 전문화, 행정의 간소화 등의 전제조건을 갖추어야 했었다. 형평성 원칙고수에 대한 정부의 무능한 모습은 곧바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낳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정책은 실효성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 실패하게 된다. 최근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드러낸 조사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SBS 라디오와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지지정당별

19) 김성중·성제환, 『한국의 고용정책』, 한국노동연구원, p. 456.

www.kci.go.kr

로는 한나라당 지지자 90%, 민주당 지지자 84.2%, 열린 우리당 지지자들조차 65%가 부동산 대책을 불신한다고 답했다.[20] 이러한 현실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의해 생산된 파괴적인 불균형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중도정치의 역할 증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배경이라 본다.

IV. 중도정당(Center Party)과 생활정치이념

1. 사민주의(Social Democracy)의 적용과 한계

서유럽의 정당정치에서 중도정당은 우파와 좌파정당의 이념적 경직성 또는 개혁에 대한 거부에 대한 반대에서 태동하였다. 산업화 시대에 다양한 이익이 표출되는 가운데, 재계와 노동계의 대표하는 거대 이익집단의 출현과 대립적 구조는 정당을 이념화 시키는 핵심적 요인이었다. 선거에서 유권자 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자들의 지속적인 지지가 필요함을 깨달은 중도정당들은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강령에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겪게 되었다. 이들 중도정당은 자유, 민주주의, 탈집중화, 사회정의 등의 원칙을 표방하면서, 개인권리 중시, 진보정치지향, 사회정의와 평등주의 강조, 경제 분야에서 국가개입의 최소화에 반대하는 정책적 목표를 추구하였다.

실제로 독일 사민당은 좌익-진보성향의 사회민주주의를 시대의 이념으로 수용하고 강령의 변화를 통하여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여 왔다.[21] 통합과 개혁을 전제로 한 사민당의 강령 수정은 시대에 적합한 '이념의 정체성'과 '당의 정체성'을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인 조건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22] 특히 베를린 강령을 통하여 기존의 좌파와 우파(자본과 노동, 생산과 분배)에 의존한 이념적 스펙트럼의 틀을 벗어나 탈산업시대의 새로운 이슈(환경, 평화, 여성)와 대중을 폭넓게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된 점은 통일된 독일 발전에 기초가 되었다. 독일식 사민주의가 한국 중도정당이념으로서 적합한가? 참여정부와 열린 우리당의 경제, 외교안보 정책을 살펴보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양국의 정치제도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많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좌파-진보 성향의 두 중도정당의 주요정책 비교를 통하여 유사성과 차이점을 간략하게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두 정당간의 유사성은 경제, 외교안보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사민당은 경제정책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정책(해고규정)과 감세정책을 통한 기업부담 최소화, 사회복지의 축소를 통한 국가지출 최소화를 추구하는 한편, 외교안보분야에서는 평화를 강조하는 좌파성향의 노선을 유지해왔다. 진보적 개혁 성향을 지닌 열린 우리당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이 노동시장의 유연화, 기업에 대한 감세, 낮은 복지 예산 지출(2004년 회계연도 전체정부 예산의 7.7%), 자주 평화외교 등은 독일 사민당 정책의 것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다음으로 차이점은 사민당의 경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획득한 반면, 열린 우리당에

20) 뷰스앤뉴스(www.viewsnenws.com), 2006. 11. 11.
21) 1875년 Gotha 기본강령, 1891년 Erfurt 강령, 1921년 Gorlitz 강령, 1925년 Heidelberg 강령, 1959년 Godesberg 강령, 1989년 Berlin 기본강령 등을 통하여 사민주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22) 이경호, "사회민주주의, 개혁과 통일을 담을 그릇이 될 수 있는가?: 독일사회민주주의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누리』 2006년 가을호, p. 116.

www.kci.go.kr

대한 국민적 지지와 신뢰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정책이 실패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05년 이후 독일에서는 대연정을 통하여 정부를 구성한 기독교민주연합(CDU)과 기독교 사회연합(CSU)이 복지와 분배 위주의 경제정책에 한계를 지적하고 투자확대에 의한 성장정책을 시행하는 등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이 노조, 세금, 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이 저해되고 고용이 위축된 상황 하에서 사민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위기를 목격하고 있다.[23] 이러한 세계적 추세 하에서 세계화 시대에 친자본적 경제모델을 새롭게 창조하지 않는 한 사민주의이념에 근거한 한국의 중도개혁 정당 역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 할 것 같다.

2. 민주당의 생활정치와 발전과제

민주당은 강령에서 당이 지향하는 정치가 자유, 공평, 신뢰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한국인의 삶을 최상으로 만들기 위한, 그리고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사회 불안정과 긴장요소를 민주당이 해결하는데 있어 기준을 제시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극단적 이념의 양극화를 지양하는 중도정당(Center Party)으로서, 자유민주주의에 근거하여 현실적인 방법으로 실질적인 사회변화를 추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대의 하에서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위한 생활정치 구현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사안들을 정치의 중심에 두고자 하는 생활정치 이행은 현재 한국 사회의 총체적 위기는 물론 정당정치의 가장 심각한 단점으로 간주된 국민적 신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주당의 정책공약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획득하기 위한 그 실천방안이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강령에서 거대기업의 시장 영향력의 대체, 사회복지정책, 그리고 혼합경제의 출현을 현대사회특색이라 규정짓고, 이러한 환경 하에서 사회의 질적 변화가 초래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보지식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으로 경제활동의 중심이 이동되는 것과 환경, 인권, 여성, 빈곤과 같은 새로운 사회가치의 발전을 탈산업사회로의 변화의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과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좌-우 이념적 양분을 부정하고, 현실적이고 실용적 접근인 생활정치 이행을 주장한다. 현실적 실천을 위해 i) 탈계급정치 ii) 재계의 영향력 강조 iii) 분권화 iv) 정부의 전문화 v) 대의기구의 영향력 강화 vi)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vii) 경제성장을 전제로 한 실업과 복지문제해소 viii) 자원의 동원과 분배 관리를 위한 기획관리 제도운영 등의 가치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대부분은 서구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에서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중도정당이 도입한 방안들과 많이 유사하다. 구체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탈산업사회에 중요시되는 환경, 인권, 여성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법,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강조한다. 둘째, 실용주의 이념과 관련하여, 민주당은 보수-진보 이념적 양분으로 인한 지역·계층·세대 간의 대립과 갈등구조를 완화하는 등의 탈계급정치를 위한 중도개혁정치 구현을 강조한다. 셋째, 분권화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정부의 책임 강화, 지역현안에 대한 분쟁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넷째, 정부에 대한 대의 기구의 통제 강화와 관련하여, 민주당은 국회의 국민의 민의수렴과 갈등조정과 법안 및 예·결산 심

23) www.donga.com, “스웨덴 복지천국 간판 내리나”, 2006. 09. 11.

www.kci.go.kr

의·의결 기능을 통하여 정부에 대한 견제라는 본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장한다. 다섯째, 투자확대와 경제성장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정보·생명·나노·우주항공과 같은 첨단 분야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중 투자 할 것을 강조한다. 여섯째, 실업해소와 생산적 복지는 이러한 첨단 분야 투자 정책으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증대효과가 나타날 때 가능하며, 민주당의 중소기업 위주의 제조업 발전 방안과 외국투자유치방안은 이를 뒷받침하는 제안이다. 마지막으로, 자원의 동원과 배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부분적 국가기획제도 필요성과 관련하여, 민주당은 국가경제운영과 중앙-지방 정부 간의 효과적인 재정배분을 위해 통합재정운용체계 시행을 제안하고 있다.

이상의 정책들이 한국사회발전은 물론 실용주의 중도정당으로서 민주당의 이념 정체성 확립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구적 이념 정체성 없이도 한국 정당들이 존재해왔던 사실과 더불어 원내 소수정당이라는 위치는 민주당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이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정책정당으로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것이다. 민주당이 생활정치 구현을 위해서는 다음 분야에서의 인식변화와 정책개발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정책 우선순위에서 사기업 또는 경제 발전에 대한 가치를 분배 또는 사회정의보다 중요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당내 이념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사민주의적 구성요소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 늘어나 사회보장부담을 조세에만 의존하는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 될 수 있으며 기업의 투자를 위축 시킬 수 있다.[24] 조세 형평성 문제는 자영자, 근로자간 그리고 계층 간에 나타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자가 부담하는 조세부담비율이 자영업자들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더불어 지난 5년간 저소득층과 중산층 근로자의 세부담 증가폭이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폭보다 높았다는 점을 볼 때, 조세정책이 부의 양극화 해소보다는 오히려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25] 둘째, 팽창된 정부기능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가그룹에 의한 정책심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셋째, 행정의 간소화로써 정부역할 증대에 따른 부담을 감쇠키고, 정책 입안 단계에서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이익집단들 간의 이익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과감한 구조조정이 전문기술관료 중심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정책결정 입안과 확정이전 단계에서 정책에 대한 평가와 견제를 위한 외부통제제도의 활성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선진산업사회에서 다두체제의 변형을 통한 국가에 대한 외부통제 수단들-시민단체 활동, 대중언론감시, 공청회-이 활용됨으로써, 작통권 반환과 같은 안보문제에 관한 결정에서 민주적 참여를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과제 이외에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은 많다. 하지만 이들은 실용주의적 생활정치를 표방하는 민주당이 사회변화와 유권자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통하여 민주당은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민주당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24) 한국의 세입구조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가 주된 세입기반(2005년 말 71%)을 이루고 있는 구조이다.
25) NABO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2006-2010)』, 국회예산정책처, 2006. 10, pp. 25-27.

www.kci.go.kr

이 글에서는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양극화 문제와 해결을 위한 민주당의 생활정치 논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사회에서 파괴적인 좌우이념 대립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민생경제가 등한시 될 때, 정치권은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응방안을 기대하는 국민의 압력을 무시했다. 특히, 현 정부의 좌파와 우파에 대한 편견, 그리고 전문성과 도덕성의 결여로 인한 정책실패는 국민들이 무책임 또는 무능한 정부로 평가하는 요인이었다. 또한 참여 정부는 복지사회 건설에 전제되어야 하는 요소로서 경제적 환경의 중요성을 무시했다. 민주당은 생활정치에서 투자확대에 의한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어 재계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생활향상을 위해 정책결정관정에서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정강정책에 의해 뒷받침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 요약과 한국 정당정치발전을 위한 다음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모든 민주국가들에서 민주주의 발전과 공고화를 위해 다양한 이론적 접근과 실제적 방안이 모색되는 가운데, 권력에 대한 통제 문제가 주된 논의의 대상이었다. 그 결과 민주주의 본질적인 가치인 시민의 권리(정치, 경제, 단결)는 소홀히 취급되었다. 탈산업 선진사회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보호 문제를 현대정치의 중심주제로 간주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민주주의의 사회경제적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념적 양극화를 지양하고, 혼합경제체제에서 성장과 분배 가치가 양립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셋째, 참여민주주의를 유지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 가운데, '행정기구에 대한 구조조정', '관료의 전문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정책 공동체' 또는 '정책 네트워크' 제도화를 통해 정부의 전문화 프로그램으로 야기 될 수 있는 시민 또는 비정부단체들의 역할 감소를 방지해야 한다. 이상에서 제안된 내용들이 제대로 실천된다면, 한국은 21세기 형 정치 패러다임 형성은 물론 역동성을 실질적인 사회발전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문]

김계수, 『歐美政治思想史』서울: 일호각, 1986, pp. 243-249.

김성중・성제환, 『한국의 고용정책』, 한국노동연구원, p. 456.

박효종, "한국 보・혁갈등에 관한 일 고찰: '포스트민주화 패러다임'의 부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새로운 갈등구조와 국민통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체 학술세미나, p. 16.

백승현, "국민 대표의 원리와 민주주의: 이론과 평가," 『시민정치학회보』2006 제 7권, p. 66.

이경호, "사회민주주의, 개혁과 통일을 담을 그릇이 될 수 있는가?: 독일사회민주주의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주누리』2006년 가을호, p. 116.

조희연, "한국의 이념 갈등과 '진보의 혁신', '보수의 혁신', 『한국사회의 새로운 갈등구조와 국민통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체 학술세미나, p. 65.

[영문]

Barnard, Frederick. 2001. *Democratic Legitimacy: Plural Values and Political Power.* London: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Giddens, Anthony. 2004. *The Third Way: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 Cambridge:

www.kci.go.kr

Polity Press.

Lukes, Steven. 1994. "Five Fables about Human Rights," in Stephen Shute and Susan Hurley (eds), *On Human Rights: Oxford Amnesty Lectures.* New York: Basic Book. pp.

Plamenatz, John. 1993. *Man and Society: From Montesquieu to the Early Socialists.* London: Longman. pp. 116-122.

Rasmussen, David (ed). 1995. *Universalism vs Communitarianism: Contemporary Debates in Ethics.* New York: MIT Press. pp. 1-10.

Rawls, John. 1993. "The Law of Peoples," in Stenphen Shute and Susan Hurley, eds. *On Human Rights: The Oxford Amnesty Lectures.* New York: Basic Books. pp. 62-75.

Vlastos, Gregory. 1984. "Justice and Equality," in Jeremy Waldron (ed), *Theories of Righ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Waldon, Jeremy. 1990. *The Right to Private Property.* Oxford: Clarendon Press.

William, Geraint (ed). 1993. *John Stuart Mill, Utilitarianism: On liberty, Considerations on Representative Government, Remarks on Bentham's Philosophy.* London: Everyman.

www.kci.go.kr

Abstract

Korea's Democratization in the 21st century and the Ideology of Center Party:
Focused on the Analysis of Democratic Party's Life Politics

Lee, Goo*

This paper analyses the problems of ideological polarization between the left and the right in the areas of politics and economic. Based on this, it will be examined the principles and theoretical logics of 'life politics' proposed by the Democratic Party. The aim of this analysis is to suggest the model for building the advanced society through elaborating social consensus on compatibility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in the 21st century.

To do the task, this paper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evolving Korean society in terms of three aspects: condensity, pluralism and irresponsibility. The features resulted in serious problems such as the distortion of party politics,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After solving the substantial problems, Korea will take an opportunity for the construction of the advanced society in the post-industrial period. The prime agenda of this Korea should be the human rights that is the viable value of democratic society.

■논문접수일 : 2007년 4월 6일, 논문심사일 : 2007년 5월 2일, 게재확정일 : 2007년 5월 17일

* Research Fellow, The East-West Cooperation Foundation.

www.kci.go.kr